

나의 회고



내가 겪은 편협의 반독재 언론투쟁

李寬求

초대 편집인협회 회장

한국신문편집인협회(이하 편협으로 약칭)는 1987년 4월 7일로써 어느덧 창립 30돌을 맞이하였다. 30년 전 이날은 우리 민간신문의 시조인 「독립신문」 창간 61돌이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명동 시공관에서 독립신문 창간 61돌 기념 언론인대회와 아울러 편협결성 대회를 열고 신문인이 지켜야 할 신문윤리강령을 채택했으며 매년 4월 7일에 신문주간 대회를 열기로 결정 실시했다. 다만 제3차 대회 때부터는 「신문의 날 대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어떻든간에 해마다 이 날이면 전국 언론인들이 모여 언론자유와 민주개화의 독립신문정신을 되새기면서 민주언론의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당년의 표어를 내걸고 협동 단결하는 계기로 삼아왔었는데 75년 19회 신문의 날에는 표어도 설정하지 못한 채로 넘기고

맡았다. 발기 당시부터 편협 초창기 4년 동안 회장의 직을 맡았던 나로서는 금석의 느낌을 억누를 수 없었다.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은 광복 건국 이후에도 끊일 새가 없었다. 이는 국토분단과 동족상잔의 참화 속에서 집권자의 독재까지 싹트고 자라났기 때문이다. 집권의 강화와 연장을 위하여 거듭하는 정치과동(선거과동)에는 언제나 언론단속의 입법공작이 따라 붙어 왔다.

제1회 대회 때만 해도 언론 단속의 독소조항이 삽입된 선거법 개정안을 정부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데 반대하는 결의를 대회에서 채택하는 동시에 곧 결연한 행동으로 옮겨 공개토론 대회에 이어 전국언론인대회를 개최하는 등 언론인들은 모두가 하나로 뭉쳐 그 악법 통과를 막았다. 이를 전후해서 동아일보와 대구일보의 필화사건이 잇따랐다.

제2회 신문주간대회 때도 언론탄압의 독소조항을 삽입시킨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시도에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전국언론인대회를 개최하는 등 맹렬하게 항쟁했으나 이 악법은 결국 자유당 정권의 기만 폭력으로 야당 의원들을 따돌리고 자유당 의원만이 모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기습 통과시켰다.

58년 12월 17일 법사위는 본 법안의 찬성 반대 토론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 의사당에서 개최하고 그 진행상황을 전국 방송으로 공개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 그 때 연사로서는 찬성측에 문인 조연현(趙演鉉) 법조인 문인구(文仁龜) 교수 신도성(愼道晟)이며 반대측에 편협회장 이관구(李寬求) 변호사협회 부회장 이병린(李丙麟) 교수 신상조(申相楚)였다.

그 이틀 뒤인 19일에 열린 법사위원회에서는 점심 때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자유당 의원들끼리 모든 심의절차를 생략한 채 동법안을 속결, 본회의에 상정시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격분한 야당 의원들은 이를 저지하는 최후수단으로 19일부터 의사당에서 농성투쟁을 계속했다.

농성 5일 후인 아침 자유당은 본회의 개최를 강행하기 위하여 무술경위를 출동시켜 농성 의원들을 납치하는 난투극을 벌여 지하 식당에 가두어 놓고 개회 20분만에 자유당 의원끼리 신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그 당시 나는 국회 의사당의 공청회에서 맹렬하게 반대 의견을 토로하고 그 이튿날 미국무성의 초청으로 예정되어 있는 시찰 길을 떠났는데 이러한 사기·폭력에 의한 악법 통과와 소동은 내가 미국 본토에 상륙한 때부터 날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리고 신문으로 요란하게 보도되어 당시 나의 통분한 심정을 가늠 길이 없었다. 그리고 미국조야의 반항은 이것이 야비한 경찰국가의 행색으로 비추어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李承晩 대통령에게 경고 친서를 전달하기까지에 이르렀다.

해가 바뀐 59년 정초부터 내가 주필의 자리를 맡고 있는 경향신문에 필화사건이 연거푸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워싱턴에서 알게 되었다. 1월 11일자 사설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의 기사가 허위 보도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동시에 정계의 혼란을 조장한 것이라고 하여 정부는 기사의 정정과 사설에 의한 사과를 요구하고 발행인 한창우(韓昌愚)씨와 주요한(朱耀翰)씨를 문초하는 등의 법석을 떨었

다는 것이다.

그 기사 내용인 즉 “이기봉 의장은 병구를 끌고 스코필드 박사를 방문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하였는데 그 동기는 아마도 스코필드 박사가 시내 모 신문에 기고한 극히 격렬한 비판문 때문인 것으로 상상되며 박사가 그 권고를 격분한 어조로 거부한 데 대하여 양심에 찔림이 있는지 알고 싶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2월 4일자 조간 여적(餘滴)란의 기사인데 허먼스 교수의 ‘다수의 폭정’이란 논문을 인용하면서 “폭력으로 된 혁명에 의할 지라도 진정한 다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구절이 헌법상의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동시에 폭동할 것을 선전한 것이라고 하여 발행인과 필자를 내란선동죄로 기소하는 등 그전보다도 더 심한 불뚝이 튀었다는 것이다.

나는 매우 불길한 예감이 들어 2월 상순경에 귀국하려 했으나 본사에서 예정된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라는 권고 때문에 3월 중순경에 충충히 귀국했다. 경향신문은 만일을 염려하여 나를 부사장 자리에 앉혔다.

신문에 대한 탄압은 날로 심하여 이상 사설과 여적의 필화기사 외에도 3면기사에까지 말썽을 부렸다. ‘사단장은 기름을 팔아먹고 - 홍천 모 사단’이라는 기사 및 ‘간첩 河 모를 체포’라는 기사와 그리고 4월 15일자 ‘보안법 개정도 반대’라는 제목의李大통령 회견기사 내용이 허위보도이거나 당국의 게재금지 사항이라는 트집을 들어 4월 30일 밤에 공보실장 전성천(全聖天)으로부터 군정법령 제88호 및 55호에 의거, 경향신문의 발행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졌다. 이 두 법령

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1년 동안 위헌처분을 취소하라는 집요한 법정투쟁을 벌였으나 아무런 결말을 보지 못했다가 4·19학생의거로 자유당정권이 붕괴하려던 4월 26일 밤에 복간된 것이었다. 이는 마침 편협 제3회 신문의 날 대회 당시의 사건이다. 편협은 경향신문 폐간처분에 대하여 일찍부터 항의성명과 그 폐간조치의 취소를 요청하는 연판장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왔었다.

이제 내가 겪었던 당시를 회고하면 갈수록 더욱 가열해진 언론 탄압과 발행인이나 편집인이나 기자 할 것 없이 굳게 뭉쳐 반독재 투쟁을 지속했던 일이 도리어 언론인의 긍지를 드높여 주었다.

자유 언론인들이 받는 수난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그칠 날이 없었다. 앞으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또 그러할 것이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정의에 입각하여 약자를 돕는 것이 언론인의 생리요 생명인 까닭에 권력으로부터의 다소간의 저항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론자유에는 책임이 수반한다. 공공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고차원의 윤리 규범에서 우러나는 타율아닌 자율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편협 30년사’에서 옮겨 실음>

나의 회고

「언론법 실시 전면보류」가 성립되기까지



崔錫采
제 3대 편집인협회 회장

38일간에 공했던 언론법 파동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 이른바 「유성 회담(儒城會談)」은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훗날을 위해서 여기 그 정확한 기록을 남겨 두고 싶다는 요청에 의해 회담에 참가한 한 사람으로서의 증언을 하는 심정으로 그 경위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투위 즉 언론윤리위원회法 반대투쟁위원회」는 최초 실행위원회를 통하여 모든 투쟁 방침을 결정하고 일을 처리해 왔었는데, 정부와의 대립양상이 더욱 험악해지고 투쟁에서 이탈하는 사(社) 또는 실행위원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늘어나게 되자 소집이 여의치 않게 됨으로써 부득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상임위원회(劉鳳榮위원장, 高在旭 洪鍾仁 金南中의 3부위원장, 편집대표 崔錫采, IPI대표 金圭煥, 서울시내 편집국장대표 金光涉, 기협대표 李綱鉉 李桓儀 간사 朴鴻緒 嚴基衡의

11명으로 구성되었다가 7월 28일 발협의 윤리위소집 찬성 서면통고 이후는 金南中씨 불참 10명으로 됨)를 만들어 매일 꼭 한두 번씩 회동하여 그동안 기동성을 발휘해 왔었다. 말하자면 언론법 반대투쟁의 「지휘본부」격이었다.

이 상임위원회에 정부측과의 접촉이 「공식」으로 논의된 것은 7일 오전 회의였다. 여기서 「공식」이라고 한 것은 대부분의 상임위원이 벌써 그보다 앞선 2,3일 전부터 상위를 대표할만한 원로급들이 정부 측,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청와대측과 막후에서 「비공식」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챘었고 워낙 복잡한 정세 가운데의 일이었기에 개중에는 석연하지 못한 미묘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던 것이다.

그날(7일 오전) 유봉영(劉鳳榮) 위원장과 고재욱(高在旭) 부위원장(洪鍾仁위원장은 결석)이 밝힌 저간의 접촉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① IPI 총회에 참석하고 귀국한 김성곤(金成坤)씨와 劉·高 양원로가 만난 것이 4일이었는데 그때는 그저 인사정도의 교환이고 다만 언론법 파동에 관해 다 같이 걱정을 나누었을 정도에 그쳤다 (후일 劉鳳榮씨의 술회에 의하면 이날의 모임과 언론법 파동의 종식과는 정말 우연의 결부라고 한다).

② 4일 저녁 소위 「반대 사(社)에 대한 보복조치해제」가 발표된 후 청와대를 방문한 金成坤씨가朴 대통령과의 면담 가운데서 느낌감상으로서 언론계에서 정부의 위신과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성의만 보여 준다면 언론윤리위원회법 시행을 유보할 수도 있는 「맥(脈)」이 있다는 「힌트」를 얻었다는 것이다.

③ 6일 (일요일) 金成坤씨의 주선으로 이후락(李厚洛) 청와대비서실장, 홍종철(洪鍾哲) 공보부장관과 유봉영(劉鳳榮), 고재욱(高在旭) 양씨가 만났고 그 연결은 김규환씨가 맡으며 이 회동에서 「언론계가 자율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언론법 시행을 유보하게끔 요청하는 구체적 내용의 각서를 정부에 제출해 달라」는 정부측 요망사항이 토의되었으며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과 언론계 대표가 만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줄거리였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7일 오전의 상임위원회에 문제의 「각서 원안」이 상정된 것인데 내용은 현행 「신문윤리강령」과 「윤리실천요강」을 예시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형식이 언론계의 위신과 이번 투쟁과정의 「저항」명분에 비추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하여 모두 한결같이 무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며 급기야 이 제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그러나 사태 수습의 실마리는 오후 회의에 가서 다시 찾게 되었다. 즉 오전 회의 결과를 안 정부 측에서는 다시 6일에 만났던 대표들과 재회담을 요청하였고 여기에 새로 홍종인(洪鍾仁)씨가 참가하여 토의한 결과 「각서가 아니더라도 달리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시사를 얻어 오후 상임위원회에서 재론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각서」 아닌 「제2의 건의서」를 내고 때마침 지리산지구 시찰차 남하(南下)한 박대통령의 숙박지인 유성으로 대표를 파견하기로 결정된 것인데 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기탄없이 말해서, 갑론을박 찬부의 의사가 엇갈려 회의 분위기는 끝까지 그다지 평탄치를 못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내일이면 서울서 만날 수 있는 데 구태여 무엇 때문에 유성까지 일부러 갈 것인가 하는 반대 의견과 둘째 만일 회담결과가 기대에 어긋났을 때 「제2건의서」를 냈다, 유성까지 갔다 … 등등의 일련의 움직임이 언론계의 투쟁 대열에 끼친 사기에의 영향이 어떨 것인가 하는 주저였다.

오후 5시반에 시작된 회의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 차 시간의 20분전인 9시 40분이었다면 가히 그 심각상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 2의 건의서」 … 지난 8월 10일의 언론인대회에서 채택된 대통령에 대한 건의서를 그 익일 청와대로 제출하면서 투위 대표와의 면담을 신청하였었는데 끝내 아무런 하회가 없었던 것이므로 재차 「건의서」를 내면서 면회를 요청한다는 데서 「제 2건의서」인 것이요, 그 전문은 따로 수록될 것이므로 소개하지 않겠으나 요컨대 「언론법은 위헌이요 반민주적이며, 언론의 규제는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언론법 시행을 보류해 달라」는 것이다.

이 철폐 아닌 보류라는 용어를 투위에서 먼저 공식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만도 한시간 이상의 격론이 벌어졌던 것을 굳이 이에 밝히는 이유는 그만큼 투위 전 간부들의 신경이 바늘처럼 예민해졌고 언론계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간두(竿頭)에 선 무거운 책임을 두 어깨에 자각하여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최후일각까지 노력했다는 것을 밝혀 놓고 싶어서이다.

지금 와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자위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회의였고 성급한 분들은 몇 번이나 「퇴장」소동이 있긴 했으나 그

래도 다시 돌아와 흥분을 가라앉히고 고민을 감추어 은인자중함으로 써 대사를 그르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표로 선정된 유봉영(劉鳳榮) 고재욱(高在旭) 홍종인(洪鍾仁) 김규환(金圭煥) 이환의(李桓儀) 그리고 필자의 여섯 사람이 서울역에 도착한 것이 발차 5분전, 정부측에서 홍종철(洪鍾哲) 공보부장관이 안내역으로 동행했고 주선역을 맡은 김성곤(金成坤)씨도 같이 탔으나 좌석이 있을 까닭이 없어 차장석을 차용(借用)한 채 달리는 차중에서 「건의문」의 초안을 만드는 등 그야말로 불난 호떡집 같은 난리의 강행군이였다.

이 초안은 4시간의 기차여행 중에서도 끝을 내지 못하고 다시 새벽 두 시에 도착한 유성의 「호텔」에서 계속되어 수정 또 수정으로 겨우 완성된 것이 오전 4시경이었으며 정부측의 어떤 사정인지는 알 수 없으나 「건의문」의 정서(淨書)가 끝나자 그 한 장을 가지고 홍鍾哲 공보부장관은 다시 새벽길을 육로로 몇 번이나 「택시」를 갈아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듣건대 그날 10시 국회에서 장관 취임인사를 해야 할 일정이라는 것이였다.

각설하고 우리 대표일행이朴대통령과 만년장 「호텔」 201호실에서 만나게 된 것이 상오 9시 15분, 먼저 劉鳳榮 위원장이 건의서를 정식으로 전달하고 간단히 그 취의(趣意)를 설명한 다음, 洪鍾仁 高在旭 양 원로가 차례차례로 「정부와 언론이 대립상태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언론인들이 언론법을 반대하여 「투쟁」하게 된 경위, 그리고 자율적 규제에 대한 자신을 숙성(熟誠)있게 강조하였으며 대통령은 정중한 태도로 점두(點頭)하면서 그의 「대언론관」을 뜨문뜨문 조

리있게 예를 들어 이야기하였다.

청와대 대변인의 표현을 빌린다면 「언론계의 원로들-劉鳳榮 高在旭 洪鍾仁 3씨를 지적함-이 밤차를 타고 고생하면서 유성까지 와서 진지하고 성의있게 설명」하는 것에 「매우 감동되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 李桓儀 金圭煥 양씨, 그리고 끝으로 필자의 차례로 각각 기자협회, IPI, 편협위치에서 본 조속한 「언론법 파동」 수습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 자리에는 李厚洛 비서실장과 주선역의 金成坤씨가 동석했으며 특히 金成坤씨는 반은 언론인 반은 공화당 의원의 자격으로 「조크」를 섞어가면서 회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적절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물론 이 회담에서 대통령에게서 그런 「교섭의 결말」이 당장 내려질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으나 55분에 공한 회담의 전체공기를 통하여 추측하건대 결코 유성까지 내려온 것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자신을 느꼈다. 그것은朴대통령의 솔직 담백한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치적」으로 대한 것이 아님을 믿을 수 있었던 데서다.

「여러분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오늘 서울로 돌아가서 국회와 당의 의견을 잘 종합해서 선처하겠으니 여러분들도 금후 더욱 협력해 주시오」 이 말이 유성회담의 「공식상」의 결론인 것이다.

그리하여 청와대 대변인측과 투위 대표일행이 각각 신문기자단에서 「발표」를 하기로 李厚洛씨와 합의하고 유성회담의 막은 내려진 것이다.

그 이튿날인 9월 9일 밤 「언론법 실시 전면보류」가 있었던 것은 주지된 바와 같다. <‘편협 30년사’에서 옮겨 실음>

나의 회고

유신체제하에서의 편협



柳建浩 제 5대 편집인협회 회장

1973년 3월, 편협 회장을 맡을 당시의 우리나라 언론계는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언론계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고조된 긴장상태는 거의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전해인 1972년 가을 대통령의 3권 통제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대통령 간접선거를 규정한 헌법개정으로 유신체제를 확립한 권력체제는 점증하는 국민들의 갖가지 불만을 힘으로만 다스리려고 하였고 잠재한 사회불안 요소는 표출을 억제당한 채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는 월남의 휴전이 성립되고 월남의 공산화가 임박해 오고 있었다.

편집인협회 회장에 선출되어 회장일을 맡은 지 며칠 되지 않아

73년도의 「신문의 날」 기념행사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의 각종 기념행사 축소 방안에 따라 신문·의 날 행사를 중단해야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신문의 날 행사가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었으므로 여러 가지로 조출한 기념행사나마 치렀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았지만 마침내 신문협회가 신문·의 날 행사 중단을 결정하고 이를 언론 단체에 통고하게 되어 73년도 신문·의 날 행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실로 답답한 심정이었다.

그 밖에도 3월 29일 휴간된 동화통신사 사원들의 딱한 사정이 문제로 등장했다. 실직한 동화통신사원들의 구제를 위한 방안이 여러 가지로 검토되었으나 얼어붙은 사회 환경 속에서는 별 뾰족한 수가 나올 수가 없었다. 결국 각 언론사 발행인과 편집국장에 구제요청 공한을 내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는데 이때의 무력감은 오래 괴로움으로 남게 되었다.

그뿐인가, 5월에 접어들어서는 대한일보가 역시 폐간되었다. 윤주영(尹胄榮) 문공부장관을 방문하여 최대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어느 만큼의 실적 언론인이 구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저 「선처를 바랄 뿐」인 입장이 서글프기조차 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소위 박영복(朴永復)사건의 여파로 구속된 중앙일보 이원달(李源達)기자 문제로 편협 보도자유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범정신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李기자를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결의를 실천하기 위해 회장단이 김치열(金致烈)검찰총장을 방문, 李기자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였는데 검찰이 이를 뒤에李기지를 석방한 바 있었다. 이런 일들이 새삼 기억에 떠오르는 어제 오늘이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75년 정초에 편협회장단, 운영위원 연석회의에서 「74년 10월이래 일선기자들의 언론자유수호운동은 당연하고 순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 집단 해약사태는 시정되어야 하며 발행인, 편집인협회 기자들은 공동운명체」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각종 규제와 제약 속에서 그나마 편협으로서의 입장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런 일이었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언론이 해야 할 일을 획일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것은 무슨 변혁스러운 일이 생기면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은근히 압력을 가해오는 것이었다.

우유부단인양 그렇저렇 넘어간다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편협 회장을 맡고 있는 동안 문제도 많고 답답함과 서글픔도 없지 않았지만 76년 10월에 신문용어통일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것과 외래어표기에 있어 교과서 등 교육용어와 신문의 보도용어가 각각 달라 이를 통일하여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문교부에 외래어 표기통일을 위한 건의를 한 바 이에 긍정적인 발전이 이룩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1973년 이후의 우리 언론계는 수없는 고난을 겪었다. 파란만장한 시기였다고 말하고 싶다.

5·17 이후의 신문 통신 통폐합, 언론기본법 제정 등 음썩달썩 못하게 묶여 있으면서도 몸부림치면서 끈질긴 정진을 계속해 오고 있는 언론계가 오늘의 개방 시기를 맞으면서 지난날들의 험난한 고비에서 좌절됨이 없이 버티어 낸 발자취를 잊지 말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싶다.

언론자유란 한 두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두터운 신뢰 위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자 한다. <‘편협 30년사’에서 옮겨 실음>

나의 회고

탑을 지키고 키우는 심정으로



李禹世
제 6 대 편집인협회 회장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의 첫 인연은 196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조선일보 편집 제1부장이 되면서 회원으로 가입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18년 뒤인 1983년 1월 28일 체육회관 강당에서 열린 제 31회 편집정기총회에서 제6대 회장으로 뽑히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그때 나는 서울신문 주필이었는데 솔직히 말해 영광스러움보다는 한없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었다.

한 회사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언론대로(大路)에 뛰어들다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1957년에 태어난 편협은 그때 인간으로 치면 20대 중반의 한창시절에 접어든 시점이었던 만큼 무언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줄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나에게겐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여년 동안 닦아진 편협의 기반이 매우 탄탄했고 우리 언론계의 거목이라 할 수 있는 선배 회장님들이 개척하신 진로가 분명했기에 나는 이런 저런 두려움으로부터 쉽게 벗어나 나름대로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뛰기 시작할 수 있었다.

우리 언론을 상징하는 거대한 탑… 이 탑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여 우리의 언론 현장에 빛과 힘을 주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이 보배로운 탑을 잘 지켜나가는 일에, 그리고 한 치라도 더 탑의 키를 높여 나가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다는 것이 편협의 운영을 맡은 회장으로로서의 다짐이었다.

그 첫 단계로 편협의 활성화를 위한 회칙의 개정에 중지를 모았다. 그 결과 부회장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모든 일간신문 통신방송의 편집 보도국장이 편협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위원수를 「17인 이내」에서 「24인 이내」로 상향조정했다.

그리고 운영 보도자유 심사 등 기존 3개 위원회에다 국제위원회를 신설, 모두 4개 위원회로 늘렸다.

이러한 조직의 확대 개편은 언론현장의 대들보들이 편협의 발전에 보다 더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 시대 새 언론의 주도자 상에 걸 맞는 편협이 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국제위원회의 신설에 큰 뜻을 두어 국제정보의 능동적 처리와 국제 행사·국제 세미나 등 상호교류의 신장에 박차를 가했다.

그동안 20차례나 이어 온 한·일 편집간부 세미나를 언론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편협주관으로 하게 되었고 외국인사초청간담회라든가 외국기자를 위한 송년파티 등을 새로 시작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 따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선회원들이 자주 모여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한다는 뜻에서 10여 가지의 기존 연간 사업 외에 전국 주필·논설주간토론회 같은 것도 새로 마련해 보았다.

이밖에 언론 실무면에서는 황서체 편집 신문용어의 순화 편집국 기구와 인사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위원회를 두어 그동안 부각돼 온 여러 가지 과제의 발전적 해결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편협의 활성화 작업이라든가 새로운 길의 개척을 위해 모든 회원과 실무진이 정성을 다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회장으로서는 제대로 뒷받침을 하지 못한 점 두고두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1984년 8월 나는 서울신문 사장이 됨으로써 회장을 맡은 지 1년 반 만에 오랜 세월 정들었던 편협을 떠났다.

그리고 편협은 다행스럽게도 훌륭한 새 회장을 맞이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보여 주게 되었다.

오늘을 뛰면서 내일을 생각해야 하는, 그리고 역사의 개척자이자 영원한 증인이기도 한 언론, 그 사명과 책임은 지금 어느 때보다 무거워졌다. 그만큼 편협에 거는 국민적 기대 또한 커진 것이다.

<‘편협 30년사’에서 옮겨 실음>

나의 회고



대변혁의 시대, 생존을 위한 변화 시도

安秉勳
제 9 대 편집인협회 회장

1990년대 초는 모든 분야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급변하던 시기였다.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권위주의 시절의 가치와 질서들이 일시에 무너지고 있었다. 또 생존을 위해선 국제적 가치와 기준을 받아들여야 했다. 동구권 붕괴이후 동서진영의 이데올로기 경쟁은 승부가 났으나 그로 인한 새 국제질서 형성을 위해 각국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산업적으로는 퍼스널컴퓨터 사용이 일상화되고 인터넷시대가 열리며 정보화 시대의 본격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 엄청난 변혁의 시대에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제9대 회장을 맡게 됐다.(1991년 1월 18일)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한국 언론의 중심인 편협은 거목이라고 표현해야 옳을 선배 언론인들이 이끌지 않았던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선배 동료 후배 언론인들과 마음을 모으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 더욱이 다소 빨리 편협 회장을 맡게 된 터여서 화합을 가장 중시해야 했다. 당시 집행부에서 함께 일했던 여러 선배 동료들이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끌어준 걸 지금도 감사히 여긴다.

변화의 시대에 편협이 해야 할 일은 언론계의 생존 발전을 위해 언론의 변화를 선도하는 것이었다. 치열한 국제경쟁 시대에 국가에 기여하는 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국내 지향을 국제 지향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편협의 사업들을 이 기준과 가치에 맞춰 추진하려 애썼다. 또 한국 언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정치 1면주의'를 '경제중심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기사의 성격도 '사건 중심'에서 '정보 중심', '물량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행부를 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사업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당시 편협의 재정 상태는 열악하기만 해 새로운 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치기 힘든 상황이었다. 고민 고민하다 언론재단들에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다. 당시에는 서울언론재단 성곡언론재단 신영연구기금 3개 언론 기관이 있었다. 이들 재단이나 기금에 출연한 대우 쌍용 현대그룹 총수들을 만나 지원을 요청했다. 김우중, 정주영 회장은 필자가 직접 만났고, 김석원 회장은 현소환 편협 부회장이 접촉했다. 천만다행히 세 분 모두 재단을 통해 적극 지원을 약속해 주었다. 정주영 회장은 한 15억원쯤 지원해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건 너무 과해 거절했다. 결국 3개 재단으로부터 모두 3억5천만원을 지원받기로 결정했다.

조직과 자금을 마련한 뒤 첫 사업으로 ‘뉴스 메이커와의 조찬 대화’를 시작했다. 이는 취재원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시야를 넓히고 기사 판단 등 실무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 뉴스메이커의 연설은 10분으로 제한한 반면 질의응답에 중점을 뒀다. 회원들이 뉴스메이커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직접 기사화할 있도록 석간 마감시간 전까지 대화내용을 요약해 각사에 제공했다. 사실 이 같은 조찬대화는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자유언론의 전통이 오래된 국가에선 대부분 실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랜 권위주의체제에 시달린 한국 언론계로선 현실적으로 도입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첫 조찬대화는 4월 12일 이종구 국방장관을 초청해 이뤄졌다. 이장관은 이 자리서 ‘북핵 응징 가능성’을 언급,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장관은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가입토록 국제사회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이 실패할 경우 강력한 응징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엔테베를 연상해 보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당연히 이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고, 그러자 이장관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의 대응책중 하나로서 얘기했다”고 해명하며 한발짝 물러섰다. 그럼에도 오해의 소지가 가지지 않자 국방부는 이장관의 북한 핵 관련 발언자체를 취소했다. 하지만 외신들이 이장관의 발언내용과 발언취소까지 모든 과정을 보도하는 바람에 오히려 국제적 이슈가 되고 말았다. 야당도 비난과 함께 문책을 요구했고 북한도 조평통을 통해 비난성명을 발표해 이장관이 곤혹을 치렀다. 그러나 조찬대화는 세간의 주목을 받아 성공적 출발을 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조찬대화는 대선후보들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씨를 비롯해 세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인물들을 시의 적절하게 초청,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기대했던 뉴스생산기능을 톡톡히 해주었던 셈이다.

편협은 국내 인사들뿐 아니라 외국 주요 인사들도 조찬대회에 적극 초청했다. 도널드 그레그, 제임스 레이니 등 주한 미국대사, 소콜로프 주한소련대사, 張庭廷 주한 중국대사, 질 아누이 주한 EU대사는 물론이고, 마지막 홍콩총독 크리스토퍼 패튼, 폴 뉴월 영국런던 시장, 마이클 헤슬타인 영국상공부 장관 등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외국인 연사들을 초청했던 것은 언론 일선에서 활약하는 회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며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편협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은 국제환경저널리스트대회 서울 개최, 한국-EU언론인세미나 창설 등으로 이어졌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일본과 편집간부세미나를 하는 게 국제교류의 전부였던 점을 감안하면 큰 진전이었던 셈이었다.

1994년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열렸던 국제환경저널리스트대회는 세계 25개국에서 64명의 언론인과 의회지도자 종교인 환경전문가들이 참가했었다. 이 대회는 참가자들의 면면이나 규모면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와 글로벌포럼 매체위원회(위원장 조지 크립스키) 한국프레스센터(이사장 이상하)가 공동주최하고 유엔환경계획 유엔아동기금 유네스코 유엔인구기금 유엔공보국 등 5개 유엔기구가 공동후원한 행사였다. 서울대회는 '환경위기와

언론의 역할' 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참가자중 조지 크립스키위원장은 AP통신 출신의 국제적 언론인이었고, 유엔환경계획(UNEP) 총재인 엘리자베스 다우즈웰 여사는 UN 사무차장도 겸했던 국제적 인물이었다. 언론인으로선 찰스 알렉산더 미국 타임지 수석편집위원, 아프산 바시푸르 프랑스 르몽드지 UN 특파원, 마티아스 나스 독일 차이트지 편집장 등 거물 언론인들이 대거 참석했었다. 히로나카 와카코 일본 전 환경청장관과 헤허슨 알바레즈 필리핀 전 환경처장관 등 각료급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이 대회는 완벽한 진행 운영으로도 주목받았다. 당시 국제회의 전문가들은 정부나 그 어떤 민간단체들이 했던 행사보다 완벽했다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참고로 이 행사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具三悅 당시 유엔창설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 국장의 권유로 유치해 치렀음을 밝혀둔다.

한국-EU 언론인세미나는 조찬대화에 참석했던 질 아누이 EU 대사의 아이디어였다. 아누이 대사는 한국 사회가 미국 일본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고 EU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우선 언론인들이 EU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며 언론인교류를 희망했던 것이다. 첫 세미나였던 1993년 10월엔 한국 대표단이 EU, 1994년 11월엔 EU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당초 목표했던 일들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편협 협회보에 '1면 기사를 세계뉴스에 개방하라' '아마추어 정보에 자족할 때 지났

다' '한국 언론 정치중독에서 벗어나라' 는 등의 칼럼을 실어 일선 언론인들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또 편집·보도국장 세미나에선 취재시스템 개혁을 주제로 삼기도 하는 등 변화를 선도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 함께 고민했었다. 편집·보도국장 세미나를 제주도에서 많이 했는데 이는 일상탈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편협회장 재임 중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를 1991년 9월 출범시킨 것과 외래어사전을 1994년 3월 발간한 일도 잊을 수 없다.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가 발족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외래어 표기는 통일되지 않았다. 언론계는 언론계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심하게는 정부부처별로 외래어 표기법이 제각각이었다. 편협 보도용어심의위원회가 공동심의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건의했고, 이를 편협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면서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가 구성됐던 것이다.

또 외래어 사전은 국판 사이즈로 1천4백54페이지에 총 2만9천7백여 용어를 수록했다. 이 사전은 인명 지명 학술용어 일반용어 등 신문 방송 통신과 각급 학교 교과서에 쓰이고 있는 외래어를 집대성한 것으로, 편협 보도용어심의위원회가 소위를 구성해 2년6개월 동안 각고의 작업 끝에 완성한 것이다.

1992년에는 대통령선거법에 대한 위헌심사 청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및 그 결과 공표는 대통령선거법 65조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편협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린 대통령 선거법 65

조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와 선거권(헌법 제24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1992년 8월 1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편협은 “언론의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국민지지도 설문조사 보도는 후보들에 관한 정보를 국민전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국가중대사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가로막는 현행 대통령선거법 65조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편협은 여론조사와 그 결과의 공표가 헌법정신에 부합하며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이는 일반화된 것이라며 조사결과를 공표하기도 했다. 당시 편협은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핀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브라질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일본 등 19개국의 선거기간중 인기도 조사 가능여부를 갤럽인터내셔널을 통해 조사했는데 모든 국가에서 인기도 조사가 가능했다. 벨기에만 법적으로 금하고 있었으나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있었으며 실제 법적 제재가 행해진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언론계의 큰 어른 최석채 선생이 1991년 4월 돌아가셨을 때 언론계 선후배들과 합심해 사상 처음으로 편집인장(葬)으로 모셨던 것도 기억에 선명하다. 1992년에는 추모비를 세우고 추모문집 두 권(‘至誠感民’ ‘낙동강 오리알’)을 발간하고 기념회를 가지기도 했다. 최석채 선생 추모행사는 친지 동료 후배언론인들로부터 추모 사업을 편협이 주관해 달라고 요청해 맡아서 했었다.

최석채 선생 추모행사를 하며 오랜만에 보는 언론계의 단합에 흐뭇했던 기억이 있다. 앞으로도 자사(自社) 중심주의와 배타주의에서 벗어나 언론계 공동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는 모습을 자주 보길 바란다. 또 그 중심에 편협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나의 회고



한국 언론 100년, 새로운 100년 준비

南
時
旭
제 10
대
편집인협회
회장

내가 제10대 편협 회장에 취임한 1995년은 한국 최초의 민간지인 독립신문 창간 100주년이었다. 그해 4월 7일은 바로 독립신문 창간일이자 우리 편협의 생일인 동시에 언론계 최대의 경축일이라 할 제39회 '신문의 날'이었다. 편협과 '신문의 날'은 같은 날 만들어진 쌍둥이다.

당시 국내의 분위기는 1987년의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이룩된 이후 7년째를 맞아 그런대로 민주주의가 뿌리를 박고 있는 가운데 출범 3년째를 맞은 김영삼 정부가 '세계화'를 한창 부르짖던 시기였다. 세계화 바람은 언론계에도 그 영향이 컸다. 하기야 독립신문이 창간된 1895년과 그 100년 후인 1995년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두 시기가 모두 세기말이라는 사실이다. 19세기의 세

기말은 조선이 한창 개화로 몸살을 앓을 때였고 20세기의 세기말은 21세기를 앞두고 세계화를 부르짖던 때였다. 이런 상황이어서 ‘제2의 개화’라 할 세계화가 올바르게 되도록 우리 편협이 한국 언론의 21세기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과제였다.

그 무렵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명저의 저자인 예일 대학의 세계적 석학 폴 케네디 교수가 우리 언론에 의미 있는 시사를 던졌다. 그는 중앙일보와의 신년 회견에서 “한국이 당면한 가장 커다란 과제는 한 마디로 의식개혁”이라고 지적한 다음 “지속적인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한국인이 21세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깨우기 위해서는 교육과 언론을 활용하기를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케네디 교수는 한국 국민들이 교육과 언론을 이용하면 학문 과학 교육 상업 무역 기술의 지속적인 변화를 이룩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때마침 김영삼 정부가 만든 세계화추진위원회도 첫 회의에서 세계화를 위한 12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했는데 그중에는 세계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라는 항목도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편협은 연초부터 역점사업을 세계화 문제로 집중했다. 편협은 먼저 그 해 2월 미국 언론계의 거물인 프랭클린 슈워츠 씨(슈워츠 커뮤니케이션 사장)를 초청해서 ‘멀티미디어 시대의 신문’이라는 주제의 조찬간담회를 열고 세계 언론의 추세와 한국의 준비문제를 토의했다. 3월에는 이홍구 국무총리를 초청해서 ‘세계화와 개혁의 관계’라는 주제의 금요조찬 대화모임을 가진데 이어 투에 로르스테드 주한EU대사를 초청해 ‘김영삼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이후의 한-EU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금요조찬대화모임을 가졌다. 그해

4월 신문의 날을 맞아 언론3단체가 공동 제정한 신문주간 표어 역시 '세계를 읽는 신문, 미래를 보는 국민' 이었다. 이 같은 세계화 바람은 그 후에도 계속되어 5월에는 서귀포에서 '세계화시대의 보도용어순화' 라는 주제의 세미나도 주최했다.

나는 그 해 12월 문화일보 사장으로 가는 바람에 직책상 자동적으로 신문협회 회원이 되어 아쉽게도 편협 회장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재임기간이 불과 1년에 그쳤지만 지금 생각하면 짧은 재임기간임에도 비교적 일에 욕심을 부린 셈이다. 나는 세 가지 사업을 추진했다.

첫째는 신문윤리강령의 개정이다. 당시의 윤리강령은 1961년에 제정된 것이어서 시대상황과 맞지 않은 점이 많았다. 더구나 이 강령은 1923년에 제정된 미국신문편집인협회(ASNE)의 강령(Cannons of Journalism)을 모범으로 해서 만든 것이었는데, 미국 편협의 강령은 이미 1975년에 개정되었으나 우리는 옛날 그대로 였다. 이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강령도 개정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마침 나는 그 무렵 개인적으로 언론윤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편협 회장이 된 이상 이것을 내 손으로 고치고 싶었다. 우선 그해 3월에 한기찬 변호사를 초청해서 '신문윤리강령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제39회 신문의 날 기념 세미나를 열어 예비토론을 한 다음 5월 편협 이사회를 열어 강령개정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윤리강령은 언론3단체, 즉 편협, 신문협회 및기자협회 공동명의로 제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신협과 기협 회장의 동의를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즉시 두 단체의 회장에게 제의해서 편협 이사

회 결의 사흘 후에 신협의 최종률 회장 기협의 안재휘 회장과 내가 언론3단체장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세 회장은 요강을 개정해서 이듬해 4월 7일 신문의 날에 맞추어 공포하기로 합의했다. 나는 즉시 박권상 선생을 위원장으로 하는 강령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다행히 위원회의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가 편협 회장직을 물러난 다음 해인 1996년 2월 최종안이 마련되고 이어 곧 바로 3개 언론단체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거쳐 당초 예정일인 그 해 신문의 날을 맞아 새 강령을 공포했다. 새 강령은 구 강령의 부분 개정이 아닌, 전문개정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 미국 편협의 새 강령이 많은 참고가 되었다. 새 강령 공포 때 나는 신문협회 운영위원 자격으로 이를 지켜보면서 속으로 대단히 만족스러웠다.

둘째는 돈이 궁색한 편협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편협기금’이라는 재단법인체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재단법인을 만들면 외부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재단의 정관 제정 작업은 내가 잘 아는 어느 변호사에게 자문해서 내가 직접 초안 작업을 하는 한편 최 신문협회장과 홍두표 방송협회장을 만나 지원을 부탁했다. 두 단체에서는 대단히 협조적이어서 각각 5천만 원씩을 편협에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실제로 이 돈들이 편협에 전달된 것은 내가 편협 회장 퇴임 한 이듬해 3월이었다. 그런데 홍 회장은 내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그것은 편협의 명칭에 ‘방송’이라는 말을 넣어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로 고쳐 달라는 것이었다(당시 편협의 정식명칭은 ‘한국신문편집인협회’였다). 나는 편협에 방송사 보도관계 간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이상 명칭 개정에 하등 문제될 것이 없

다고 판단하고 회장단과 상의하고 이사회에 부의해서 그렇게 했다. 마침 삼성그룹 측에서도 성병욱 편협 부회장을 통해 기금 마련에 협조하겠다고 전해왔다. 삼성 측에서는 30억 원을 낼 의향이 있었으나 편협 회장단에서 협의한 결과 외부 기금 지원이 특정 재벌에 치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10억원만 받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재단의 설립 작업은 기초가 대충 끝난 셈인데, 재단의 정식 발족은 나의 편협 회장 퇴임 후인 1996년 11월에 설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실현되었다.

세 번째는 EU언론인들과의 교환 세미나 개최였다. 나는 편협 회장에 취임하기 6년 전인 1989년부터 편협 부회장직을 맡았는데 부회장 당시인 1993년 서울 주재 질 아누이 EU대표부 대사(프랑스인)와 가끔 만났다. 그와 대화 중에 한국 언론인과 EU지역 언론인의 정례 세미나를 추진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물론 우리 편협에서는 당시의 안병훈 회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로부터 대환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1회 세미나가 그해 11월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EU본부에서 열렸다. 편협 역사상 최초의 유럽 진출인 셈이다. 한국측 대표 일행은 모두 13명으로, 나는 단장 자격으로 현지에서 공동사회를 맡아 세미나를 진행했다. 나는 세미나가 처음으로 유럽지역에서 개최되고 영어로 진행되는 관계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영어로 능수하게 할 수 있는 우리측 주제발표자를 선정하느라고 고심했다. 또한 현지에서 행사를 잘 치르려면 우선 우리 대표단이 비행기 여행에 시달려 잠도 제대로 못 잔채로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단은 하루 미리 서울을 출발해서 스위스의 취리

히에 기착해 1박을 하면서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이튿날 오후 비행기로 브뤼셀로 날아가 한국의 EU대표부 대사관저에서 열린 저녁 리셉션에 참석하는 것으로 세미나 일정을 시작했다. 내가 중간 기착지를 취리히로 정한 것은 대한항공이 취항하는 유럽의 여러 도시 중 이곳이 공항과 시내가 가장 가까운 관계로 우리 대표들이 그 만큼 여행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리셉션 다음날 아침부터 EU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우리측 발표자 3명이 모두 수준 높은 주제발표를 해서 EU 측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EU본부로 들어가는 정문에서 보안검사가 철저했다는 점이다. 브뤼셀에서의 1차 세미나 이후 한-EU언론인세미나는 한국과 유럽에서 해마다 회의 장소를 바꾸어 가면서 개최되었다. 2회(1994년)는 서울에서, 3회(1995년)는 코펜하겐에서, 4회(1996년)는 서울에서, 5회(1997년)는 리스본에서 각각 개최되었고 그 후는 한국의 외환위기로 중단되었다. 2회의 서울 세미나에서는 다시 내가 단장을 맡았다. 3회의 코펜하겐 세미나 때는 내가 편협 회장이었기 때문에 회장 입장에서 행사를 진행시키는 책임을 졌다.

내가 편협 회장 재임 때 결정한 중요한 안건은 편협의 운영 방식 일부를 개선하는 일이었다. 편협은 그때까지 매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소집하도록 되어있었으나 회원들이 모두 현직이어서 일에 바쁘기 때문에 성원조차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방언론사의 대의원들은 잘 참석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위임출석의 경우가 많았다. 나는 부회장 시절부터 이런 현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새로 마련된 방안이 대의원총회를 2

년마다 한 번씩 소집하되 그 대신 이사회를 신설해서 이사회 중심으로 편협을 운영하기로 했다. 각사 편집·보도국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해서 모든 안건은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다음 이사회에 넘기기로 했다. 이 같은 새로운 제도는 내가 편협 회장에 선출된 1995년 1월의 총회에서 회칙 개정으로 이룩되었다. 그 결과 편협의 효율적인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내 놓고 보니, 나의 개인적 역량 부족으로 편협 발전에 필요한 더 많은 일을 못한 것이 아쉽다. 앞에서 설명한 삼성그룹의 지원이 결정된 다음 나는 다른 모 그룹 총수를 만날 기회가 있어 편협 기금 지원의사를 타진했다가 별로 신통찮은 대답을 들었다. 나는 그 후 이 그룹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타진해 보기로 했으나 내가 편협 회장을 빨리 그만 두는 바람에 이 작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했다. 이 점이 지금도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나의 회고

윤리강령 개정 가장 기억에 남아



成炳旭
제 11 대 편집인협회 회장

편집인협회와 필자는 유난히 인연이 깊은 것 같다. 편집 입회자격이 있는 중앙일보사 논설위원이 되고도 10년 가까이 기자협회 회원으로 남아 있다가 뒤늦게 편집에 가입했지만 가입 얼마 후부터 보도자유위원장 (권오기회장 시절), 운영위원장 (조두흠회장 시절), 부회장 (안병훈·남시욱회장 시절), 회장(1996~99년)을 거쳐 고문을 하면서 지금은 편집기금 이사장(2005년~)까지 맡고 있으니 말이다.

필자가 편집회장이었던 1996년 1월부터 1999년 1월까지 3년간은 김영삼 정부 말년에서 김대중 정부 초기에 이르는 격변의 시기였다. 더구나 외환위기로 인해 우리경제가 IMF의 관리를 받고 거의 모든 언론사가 엄혹한 구조조정을 겪던 시기였다. 창립 이래 만성적으로 재정형편이 어렵던 협회의 형편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 동안의

활동을 유지해 가면서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느라 고심이 많았다.

당시 편협의 수입이라고는 회원들의 회비와 신문협회 보조금(월 1백만원), 그리고 언론재단의 편협세미나 등 행사지원비가 전부였다. 이러한 재정구조로는 활동의 위축과 재정의 적자가 불가피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안병훈회장 시절(1991~95년)엔 언론재단을 운영하고 있던 3개 대기업(현대·대우·쌍용)으로부터 3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 그후 5년여간 협회의 활동·운영비의 적자를 메웠다.

1995년 남시욱회장 체제가 되면서 회장단 회의에서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안으로 편협기금을 조성해 원금엔 손대지 말고 이자로 협회 운영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신문협회와 방송협회에서 얼마간의 기금을 출연받아 이를 종자돈으로 해서 재단법인 편집인협회기금을 설립한 뒤 대기업 등에 출연을 받아보자는 것이었다.

우선 신문협회와 방송협회는 상징적 액수의 기금 출연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두 협회는 약속대로 1년후 내가 회장직을 승계하고 난 뒤 각각 5천만원씩을 출연했다.

남시욱회장과 부회장들이 분담해 대기업쪽에 기금 출연 의향을 타진한 결과 삼성을 제외하고는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 전과 달리 기금 출연이라면 10억원 정도씩은 생각해야 한다는 게 부담인 듯했다.

중앙일보 주필이었던 나예겐 삼성과의 의사타진이 맡겨졌다. 홍석현 사장 등 중앙일보 경영진에 측면지원을 부탁하고 삼성비서실의 홍보담당부사장에게 편협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부탁했다. 얼마후 삼성측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의 의향을 전달받았다. 이곳 저곳

에 부탁할 게 뭐 있느냐. 필요한 만큼 삼성에서 모두 출연할 용의가 있다. 얼마나 출연하면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편협의 모금 목표는 30억~50억원인데 회장단 회의의 결정은 10억원 정도씩 몇 군데서 모금하자는 것이었으니 이 회장의 의향을 회장단회의에 보고하고 의논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삼성쪽 의향을 보고받은 남회장 등 회장단은 편협이 삼성에서만 기금을 모두 출연받는다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삼성에서는 원래 계획대로 10억원만 출연받고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 보자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실리 보다는 명분을 취한 그야말로 '언론인 다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95년에 신문협회·방송협회·삼성그룹의 기금 출연 약속을 받았지만 신문협회·방송협회의 기금 1억 출연, 이 1억을 종자돈으로 한 재단법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금 설립, 그 과정에서 일부 부회장의 이견 제기 등 협회의 수용태세 미비로 97년초에 가서야 삼성의 10억원 출연이 이뤄진다. 그 과정에서 협회는 퇴직 충당금까지 모두 소진하는 등 혹심한 재정난을 겪었다.

편협기금이 설립된 후 몇 년간은 금리가 매우 높아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11억원의 기금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기금이사회 때마다 기금의 추가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편협이 김대중정부 이후 언론단체로서 거의 유일하게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인지 그것이 여의치가 않다. 그때마다 많이 출연하겠다고 삼성의 제의를 마다했던 95년 회장단의 '순진함'이 회자되곤 한다.

(재)편협기금 설립과 함께 나의 회장 재임중 가장 잊지 못할 일은 새로운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의 제정, 선포였다. 이 작업도 남시욱회장때 시작해 나의 회장임기때 결실을 보았다.

우리 언론계에선 매년 신문의 날 기념행사준비를 위해 신문협회·편집인협회·기자협회간 협의 회의를 갖는다. 각 협회 대표로는 보통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의 부회장과기자협회 회장이 참석한다. 회의 의제는 그해의 기념행사와 관련된 제반문제를 논의하고 다음해 사업과 행사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1995년 39회 신문의 날 준비 회의에는 부회장이었던 내가 편집인협회 대표로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사전에 남시욱회장과 협의한대로 다음해 40회 신문의 날이자 독립신문 창간 1백주년을 기념해 시대에 맞게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제안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95년 6월 세 단체가 추천한 언론계·학계·법조계·신문윤리위 관계자 7인으로 '신문윤리강령개정위원회'(위원장 박권상)가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95년 7월 3일부터 96년 1월 16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토의와 연구,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실태조사까지 거쳐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다.

학자 위원들이 주도해 만든 초안은 우리나라 언론의 취재현실보다 몇 발짝정도 앞서 있었다. 언론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은 언론이 스스로를 규제하는 자기규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취재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현실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는 이상적 요소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취재 자체를 어렵게 할 정도로 너무 앞서 가서는 실행준칙으로서 실행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개정위원회의 초안은 96년 2월 16일 편협·기협 및 학계 대표가 참석하는 공청회에 부처졌다. 그때는 내가 편협회장으로 선출된 후여서 언론의 취재와 윤리문제에 경험과 연구가 많은 회원을 편협 대표로 선임했다. 공청회에선 주로 편협대표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조목 조목 지적했다. 또 회원사 편집국장과 보도국장으로 구성된 편협운영위원회 및 개별 언론사의 의견을 편협에서 폭넓게 수집해 강령개정위에서 반영하도록 넘겼다. 이러한 편협의 노력으로 초안의 너무 이상적인 요소가 상당히 완화돼 현실보다 한두발 짝 앞서가는 정도로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드디어 1996년 4월 8일 신문협회·편집인협회·기자협회 회장이 세 단체의 이름으로 최종안에 서명, 선포함으로써 새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탄생했다.

새 강령이 만들어진 뒤 편협은 편집·보도국장 세미나와 사회부장 세미나 등을 조직해 새 윤리강령에 대한 언론인들의 이해와 내면화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아직도 기자들의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모자라는 듯한 구석이 많이 눈에 띄고 있어 아쉽기 그지 없다.

나의 회장 재임 3년 중 2년은 김영삼 정부시절이고, 1년은 김대중 정부시절이었다. 두 정부의 편협을 존중하는 태도엔 미묘한 차이가 느껴졌다. 김영삼 정부가 편협활동에 협조적이고 마음 편한 관계였다면 김대중 정부는 어딘가 복잡하고 편치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도 취임초인 1998년 신문의 날 행사에 참석해서는 '신문없는 정부보다는 정부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제퍼슨의 말

을 인용하면서 언론의 역할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명했다. 그래서 그 직후 청와대의 언론사 주필 및 보도본부장 초청 모임에서 대표로 인사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신문의 날 연설을 감명깊게 들었다. 제퍼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런 말을 하다가 대통령이 된 뒤 신문의 비판이 거세지자 신문에 대한 불신을 표명했는데 대통령계선 초심을 지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던 기억이 있다.

바로 그날 대통령이 임석하기 전 비서실장과 먼저 나온 대변인이 주필과 보도본부장들에게 그때 언론계에서 항의를 받고 있던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비서실 출입취재 금지조치는 자기네가 알아서 해결할 터이니 대통령께는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내가 기자들에 대한 취재 제한은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언론의 자유를 목표로 한 편협의 회장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느냐며 거절했다. 대통령과 식사중에 내가 그 얘기를 꺼내자 김대통령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비서실에서 불편없게 처리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후 중앙일보에 대한 김대중정부의 불만과 겹쳐 개인적으로는 청와대로부터 기피인물 비슷이 지목돼 여러모로 견제를 받았다. 편협도 내 재임중에는 정부와 특별한 충돌이 없었는데도 만만치 않고 버거운 상대로 여겨서인지 다른 언론단체에 비해 경원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의 회고

김대중 정권의 언론탄압과 정면대결



高學用
제 13 대 편집인협회 회장

2001년 1월 29일은 편협 제13대 집행부가 출범하는 날이었다. 이를 테면 21세기 첫 편협회장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그런 만큼 당연히 잔치 집 분위기이어야 했으나 사정은 그렇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의 언론탄압이 예고돼 있었던 데다 언론계 내부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해 1월 11일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언론도 공정보도와 책임 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 언론계 학계 시민 단체 국회가 합심해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라는 요지의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언론이 스스로 개혁해야한다”며 자율개혁을 강조하던 종래의 입장을 뒤엎은 것이기도 했다.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장기불황과 햇볕정책 및 대북 퍼주기에 대한 비판,

당내 갈등 등으로 코너에 몰린 대통령의 돌파구가 언론에 대한 분풀이로 나타난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언론과 야당의 질타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정거래위가 신문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더니, 국세청은 언론사 상대의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서둘렀다. 당시 김 대통령이 언론탄압이라는 극한카드를 꺼내든 진짜 이유는 아직껏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나 단지 국면전환용으로 그 같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조-중-동 등 3대 메이저를 비롯한 비편언론의 기를 꺾어놓음으로써 이 나라 자유 민주 세력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남북협작의 통일로를 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게 아닐까. 내친김에 통일대통령이 되고 싶은 야심이 서려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 진상은 차후 반드시 규명해야할 역사적 과제이다.

우여곡절을 거쳐 13대 회장을 맡게 된 나는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에 짓눌린 표정으로 그날 행사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회장 취임인사에서도 그날 분위기는 배어나고 있다. '21세기 편협을 만들겠다'며 서두를 꺼냈으나, 곧 이어 '선배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등의 결연한 내용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출범한 새 집행부의 목표는 분명했다. 김대중 정부의 언론탄압에 맞서 싸우는 것이었다. 그것은 편협의 존재이유이기도 했다. 그래서 임원진의 구성과정에서도 사명의식이 뚜렷한 인재를 망라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썼다. 친여매체에도 똑같이 집행부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되 친북, 좌경이나 부화뇌동 형은 가급

적 배제시키는 그런 방식이었다. 어쨌든 당시 임원진 구성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회의에서는 각자의 소신차이나 회사의 입장 등 때문에 다른 의견이 적잖이 노출됐으나 결과로 나타난 편협성 명명내용이나 행사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으니까….

예상대로 정부는 친여 매체와 일부 시민단체의 박수를 유도하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를 동원해 주로 조-중-동의 허점과 약점을 뒤지는 등 전방위 압박을 시작했다. 이에 대응해 편협은 두 가지 투쟁 방식을 병행키로 했다. 정부가 무리수를 둘 때마다 성명을 통해 국내외 비평가들을 확산시키는 것이 그 하나요, 편집간부 세미나나 토론회를 열 때 정부의 언론정책을 주제로 정해 국민에게 그 부당성을 알리는 것이 다른 하나다. 당장의 효과는 미약할지 모른다. 그러나 ‘펜은 총이나 칼보다 강하다’고 하지 않던가. 이는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고 있기도 하다. “어쨌든 13대 집행부에게 김대중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서 싸우라는 역사적 사명이 부여된 이상, 최선을 다해 부딪혀보자”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다.

언론탄압과 관련한 대정부 성명서는 4월 10일에 처음 발표했다. 공정거래위가 동아일보 출입 기자에게 취재 제한조치를 취한데 대한 항의 성명이었다. 편협 보도자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성명서에서 편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업무 담당 주요 사무실에 대해 동아일보 기자의 출입을 금지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기관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보도에 불만을 품고 기자의 취재를 봉쇄한 것은 정보접근

권을 차단해 언론을 압박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시정조치와 함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평소 별 관심을 끌지 못하던 공정거래위의 처사에 대해 편협이 그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정거래위가 국세청과 함께 김대중 정부의 ‘비판언론 길들이기 작전’에서 전위대 역할을 담당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어 6일후 ‘신문고시’ 부활과 관련해 성명을 냈다. 성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가 신문고시 부활을 둘러싸고 상징-반려-재상정-진통 끝 의결 이라는 우여곡절을 거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민간인 규제개혁위원들 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도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신문고시 부활을 강행한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작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규탄성명을 낼 수 없었다. 그 자체는 정부기관의 합법적인 권력행위였기 때문이다. 결국 7월 2일, 23개 중앙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가 발표된 후, 반박성명을 냈다. 국세청이 탈루세금과 과징금 명목으로 부과한 추정금이 5천억 원에 이르는데다 조-중-동을 포함한 6개 언론사는 조세범칙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처사를 유례없는 언론탄압조치로 규정하고 강경대응을 선언했던 것이다. 특히 3개 비판신문사에게 그 매출규모와 수익규모에 비해 턱없이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으로, 언론 사주를 형사고발한데 대해 “언론을 비리집단으로 낙인찍는데서 만족하지 않고 언론 사주의 약점을 들춰내 처벌함으로써 비판언론을 침묵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공

박했다.

이어 8월 13일, 6개 언론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시점에서 “우리사회에서 인신구속은 그 자체가 징벌의 의미를 지니며 당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치명적으로 손상 시킨다”며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세 번째 성명서를 냈다. 그러나 정부는 1주일 후 동아 조선 국민 등 3개 신문사 사주를 구속했고 편협은 8월 20일 이와 관련한 항의성명을 다시 발표하게 됐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법리를 무시한 채 집권측이 그 같은 처사를 밀어붙인 데 대해 우리는 분노와 함께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공박한 뒤 “지금 당장은 권력의 물리적 힘 앞에 언론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언론인들은 권력의 압력과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정론과 직필로 대응해 끝내는 펜이 칼보다 무섭다는 사실을 역사 앞에 증명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후에도 9월 25일과 10월 26일 등 두 차례 더 성명서를 내는 등 2001년에 모두 7차례의 성명을 발표해 국내외 비판여론 조성에 앞장섰다. 편협이 정부를 상대로 이같이 잦은 성명을 쏟아낸 사례가 그리 흔치 않을 것이다. 그만큼 김대중 정부의 언론탄압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으나 권력측이 의도한 ‘비판언론 잠재우기’는 실패작으로 끝났다. 언론탄압에 앞장섰던 당사자들은 그해가 가기도 전에 이런 저런 ‘비리 케이트’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줄줄이 낙마했던 것이다. 반면 3대 비판언론은 전보다 더 독자들의 신뢰를 쌓아가며 정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탄압광풍은 김병관 동아일보 회장 부인의

자살사건 등 엄청난 상채기와 함께 국제적으로 망신만 산채 용두사미가 된 셈이다. 김 대통령 자신도 그 이후로는 레임덕 현상이 가중돼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특성 때문이었지만, 편협이 성명을 발표할 때마다 주요언론이 이를 크게 또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해 우리 집행부를 고무시킨 점도 특기할 일이다.

정부의 언론탄압에 맞서 편협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포문을 열 것인지는 13대 집행부가 처음 맞닥뜨린 초미의 과제였다. 이런 저런 궁리 끝에 매년 3월에 개최하는 편집·보도국장 세미나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주제를 ‘언론자유와 언론개혁’으로 정해 정부를 공박하는 자리로 만들자. 편집·보도 책임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행사인 만큼 보도에도 신경을 기울일 것이 아닌가.”

기대는 적중했다. 주제발표자(남시욱, 김학수)의 발표내용도 수준급이었고 토론도 유익했다. 무엇보다 발표내용이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자행되고 있던 정부의 언론탄압을 직간접으로 규탄하며 자율개혁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대다수 언론도 긍정적으로 보도해 집행부의 조바심을 덜어주었다.

그렇다고 편협이 정부의 언론탄압 규탄에만 매달린 것은 아니다. 이듬해의 2002월드컵, 경제문제 등 우리사회의 당면과제들을 조명하고 개선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도 긴요하다고 판단, 그해 예정된 6차례 세미나 주제를 골고루 안배했다. 5월 11일 부산 웨스턴 조선비치 호텔에서 개최한 경제부장 세미나를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로 정하고 전운철 기획예산처 장관과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을 연사로 초빙한 것이 한 예다. 세미나에 이어 안상영(작고) 부

산시장 초청 간담회를 가진 것도 기억에 남는 일이다. 편협이 지방에서 명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 것도 그 때가 처음이다.

그러나 6월 22일 서귀포 KAL호텔에서 있던 논설·해설위원 세미나는 ‘정치권력과 언론’으로 주제를 설정해 다시 정부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당겼다. 다만 연사는 김동익 중앙일보 고문과 정경희 언론인 등 좌우 인사로 안배해 균형을 잡았다. 10월 12일의 정치부장 세미나는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과 최병렬 한나라당 부총재를 연사로 참석시켜 발표 및 토론케 했다.

편협 금요대화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산문제로 자주 개최할 수는 없어 그해 5차례에 그쳤다. ‘2002 월드컵’을 주제로 정몽준 월드컵 조직위 공동위원장을 초청한 6월 15일 행사,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 주제의 진념 경제부총리 초청 대화, ‘한·중 관계’ 주제의 리빈 주한 중국대사 초청 대화 등 대부분이 시의적절한 행사였다고 생각한다.

13대 집행부의 2년차인 2002년은 ‘월드컵의 해’이자 ‘선거의 해’였다. 그래서 7회의 세미나를 이와 관련한 주제로 개최했다. 이명박 신임 서울시장을 초청한 ‘청계천 복원과 교통대책’ 주제의 대화행사 등 금요대화도 4회 가졌다. 그러나 2003년 1월 31일, 2년간의 회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자리에서는 회원들에게 죄송한 마음만 들었다. 특히 예산확보를 못해 “21세기 편협을 만들겠다”고 한 다짐을 거의 이행하지 못한 점이 걸렸다. 재임 중 방일영 문화재단의 도움을 얻어 ‘편협 연차보고서’를 내기 시작한 점, 퇴임하면서 편협 임원진을 대폭 확충해 언론계 변화에 부응토록 한 점 등이 그나마 가시

적인 업적이었으니..., 언론계가 양분돼 탄압와중에서도 일부 친여매체와 비판신문에 사이에 서로 혈뜬는 등 적전분열상을 보인 것은 더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다.

나의 회고

“떳떳하고 당당한 신문 만들자”



崔圭徹
제 14대 편집인협회 회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의 창립 50주년은 한국언론사의 큰 획이다. 모든 것이 아직은 일천한 한국 언론상황에서 50년의 연륜은 돈보인다. 50년 전 황무지 같은 척박한 땅에 씨앗을 뿌리고 키워 오늘날의 편협을 있게 한 선배들의 혜안과 용기에 고개를 숙일뿐이다. 편협 제 14대 회장직을 맡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하나 제대로 이뤄 놓은 것이 없어 부끄럽다. 그래서 더욱 도도하게 흘러온 편협 50년을 되돌아보고 언급할 위치가 아닌 줄 안다. 그 보다는 내가 회장직을 맡았던 2003년 1월 27일부터 2005년 3월 7일 까지의 기간에 초점을 맞춰 돌아보고자 한다. 당시 언론상황에 어떤 바람이 불었고, 언론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직은 기억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당시의 기록도 남아 있다.

편협회장 취임사에서 필자는 편협의 새 집행부가 2003년 2월 25일 새롭게 들어서는 노무현정부와 시간적 궤를 같이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을 맺었다.

“편협 새 집행부는 다짐합니다. 겸손하겠습니다. 그러나 밀리지는 않겠습니다. 독선에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굼대 없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직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둔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돌아가거나 피해가지는 않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노무현 정권은 초반부터 언론에 대해 대단히 날카로운 각을 세우고 나왔다. 취임 전 2개월여의 대통령당선자시절 이미 대통령의 언론관은 여실히 드러났다. <견제하는 곳이 없고, 통제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언론권력>, <지난 5년간 정부를 끊임없이 박해한 언론> 등 대통령의 표현에서는 증오심이 배어났다. 특히 비판언론이 표적이었다. 노 정권과 언론매체 사이의 공개적인 첫 갈등은 2003년 3월 14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홍보업무 운영방안’이란 것에서 비롯됐다. 정부부처 공무원이 기자와 만날 때 공보관실에 사전통보해야 하고, 사후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 방안의 골자다. 이는 한마디로 공무원과 기자를 차단하는 조치다. 도대체 어느 공무원이 자칫 자신의 신상에 불이익을 가져올지 모를 험한 일을 찾아서 하겠는가. 초장부터 언론을 정권의 활동범위에서 배제시키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편협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편협회장 취임 후 첫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보시장 왜곡에 의한 언론자유 침해를 우려한다’는 제목을 뽑았다. 다음은 성명서

내용이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14일 발표한 ‘홍보업무 운영방안’은 새 정부의 언론관과 작금의 언론현실에 대한 원초적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오늘날 정보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언론 자유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취재의 자유엔 취재원묵비권까지 포함됨은 물론이다. 정부부처 공무원이 기자와 만날 경우 사전에 공보관실에 통보하도록 하고 사후보고서까지 제출하도록 한 것은 정보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통제 의도가 담겨있다고 본다. 정보공개법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부실한 정보 공급요인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언론의 정보수요를 제약하는 것은 정보시장을 왜곡함으로써 여론을 굴절시킬 위험이 있다.

언론에게 알릴 것만 알리겠다는 편의적 발상은 폐쇄적 밀실행정과 외눈행정을 조장하고 권력의 일탈 및 전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집권세력과 국정운영의 완전무결을 전제한 오만한 발상으로,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국정운영 방침과도 어긋난다. 또한 정부와 국민사이에서 정보소통과 여론형성을 매개하는 언론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만약 현 정권에 비판적 언론을 의식한 조치라면 더욱 문제다. ‘오보와의 전쟁’이라는 말도 섬뜩하다. 정부가 알릴 것을 충분히 알린다면 오보는 줄어들 것이고 설령 언론이 오보를 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시정 및 방어방법이 있는데도 대뜸 투쟁의지부터 강조한 것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권력과 언론의 건강한 긴장관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보시장은 어느 시장보다 자유로워야 한다. 언론

개혁은 기본적으로 언론소관이지, 정부소관이 아니다. 2003년 3월 17일>

이후로도 언론자유를 침해할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 편협은 즉각 대응, 성명서를 발표했다. 권력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정작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은 언론계 내부의 분열이었다. 인쇄매체에 대한 방송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양자간의 간극이 벌어졌고, 이어 인쇄매체 사이에서도 갈등이 증폭됐다. 대립의 분기점은 비판 언론이나, 친여언론이나 였다. 권력에 맞서 전 언론이 뿔뿔 뭉쳤던 소중한 전통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다. 솔직히 말해서 편협의 힘찬 성명서를 보도한 매체는 소수의 인쇄매체 뿐이었다. 한참 전투를 벌이다보니 어느새 전우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처럼 참담한 언론 환경도 없었을 것이다. 회사의 입장에 따라 인쇄매체 사이에서도 오월동주의 장면이 잦았다. 언론계의 피아구분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03년 4월 7일 제47회 신문의 날 기념식 개회사에서 필자는 이렇게 지적했다. <지금 우리 언론내부의 상황은 과연 함께 각오를 다질 만합니까. 속칭 ‘메이저 신문’ 이니 ‘조폭언론’ 이니 하는 말들을 왜 우리는 아무 생각없이 쓰고 있습니까. 그런 말을 부지불식간 쓰는 동안 우리는 이리저리 갈리고 나뉘어지고 맙니다. 언론이 찢기고 갈릴 때 좋아 할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권력입니다. 분리하면 다루기도 쉬운 법입니다. 여기에 왜 우리가 말려들어야 합니까. 올해 신문의 날 우수작 표어는 ‘독자에게 떳떳한 신문, 역사 앞에 당당한 신문’ 입니다. 이 말처럼 분명한 지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가 내놓은 신보도지침을 여기에 비교하겠습니까. ‘떳떳하고

‘땃땃한 신문’을 우리의 제작지침으로 삼자고 제의합니다. 과연 우리가 권력이 말하는 ‘위험한 언론’ 인지를 땃땃하게 독자들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남기는 모든 기록이 땃땃한 것인지도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권력의 호불호가 아닙니다. 권력과 관계가 아니라 독자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지상과제입니다. 독자가 외면하면 우리는 설 땅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등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노리는 틈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04년 제48회 신문의 날 기념식은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렸다. 지방에서 신문의 날 기념식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 필자는 개회사에서 참담한 언론환경을 집중 거론했다.

<권력을 앞에 두고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끼리 서로를 겨냥하는 기막힌 장면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의 전선은 방송매체와 인터넷매체에까지 번져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문의 날 제정 당시의 선배들이 오늘의 상황을 보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결국 한국 언론의 현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극도의 양분화입니다. 갈리게 된 사연은 과연 무엇입니까. 현 정권이 들어서며 무엇보다 강조한 것이 개혁과 통합입니다. 그런데 개혁은 얼마나 이뤄졌습니까. 개혁이란 주술에 말려 혼란만 조장하지 않았습니까. 언론도 여기에 휘말리지 않았는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국론분열 아닙니까. 통합은 구호에만 있지 결과는 국론분열로 나타난 것입니다. 언론의 양분화 현상도 국론

분열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한국 언론이 두 쪽으로 짝 갈라지고, 또 서로 반목하던 현장의 한 복판에 서서 당시 벌어졌던 일들을 생생하게 지켜 본 증인이다. 누구를 탓해야 할지 헛갈리는 대목도 적지 않다. 한국 언론이 이리저리 갈리고 찢겨나간 그 때를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결코 버릴 수는 없다. 추하면 추한대로 우리가 남긴 족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지금도 특히 괴로운 것은 속수무책으로 현장을 지켜 보기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편협 50년의 역사가 결코 평탄한 기록만은 아닐 것이다. 그 속에 유별나게 험난한 시절, 험난한 현장을 지켜 본 기록을 꼭 끼워 넣고 싶다.